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2024. 6.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및 의의	1
II.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기본체계	4
III. 4대 정책방향 8대 정책과제	4
1.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5
2.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8
3.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11
4.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14
IV. 추진기반 확립	17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	17
2. 공급망안정화 기금 가동	18
3. 공급망 3법 및 민관협업체계 구축	19
V. 향후 추진계획	21

I. 추진배경 및 의의

□ 현재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

○ 美-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

■ 주요국 등은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

【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참고) 】

- ①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 확충
- ② 핵심·전략 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및 보호체계 강화
- ③ 동맹국 연대·무역장벽 강화, 자원 무기화 등 공급망 블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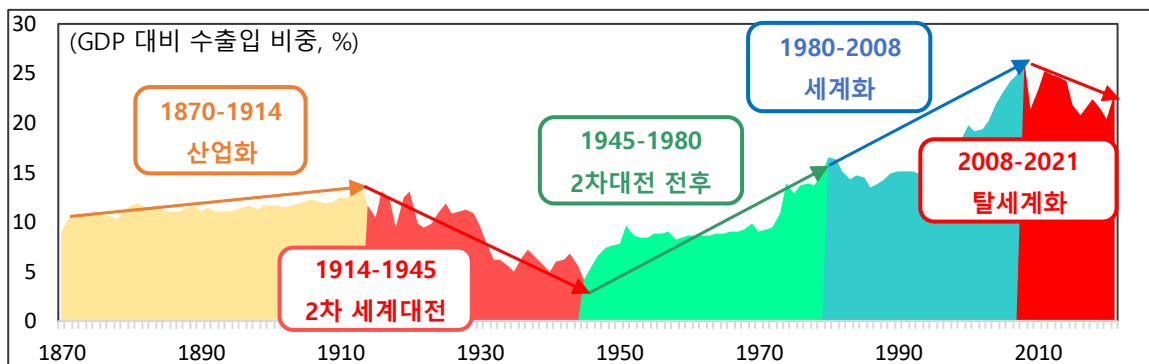
국가	① 역내공급 기반 확충	② 기술우위 확보·보호	③ 공급망 블록화
	인플레이션감축법	수출통제개혁법	IPEF · MSP 주도
	반도체 전략	특허출원 비공개	G7 · QUAD 참여
	핵심원자재법	EU 경제안보전략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
	쌍순환전략	전략물자 수출통제	일대일로 · 홍색공급망

○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우위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되는 모습

■ 국제 분업을 통한 효율화, 자유무역 질서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공감대 등 기존의 관행·규범은 퇴조 → 분절화·블록화 진행

* After decades of increasing global economic integration, **the world is facing the risk of fragmentation**(IMF, '23.1)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장기추이



* 출처: 한국은행

⇒ **향후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

□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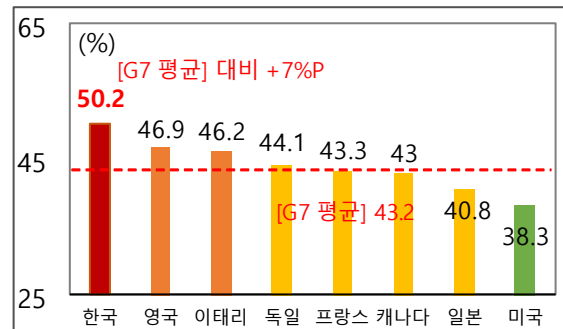
-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보유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20년)

구분		수입의존도(%)
에너지	원유	10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주요 금속	철광	99.4
	비철금속	99.3

*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 중간재 수입 비중('20년)



* 출처: 경총 경제조사본부

- 우리의 주력·미래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등에 대한 주요국의 도전과 견제 등 주도권 확보경쟁이 격화

* 전세계 산업정책 도입(건): ('18) 705 ('19) 632 ('20) 852 ('21) 1,594 ('22)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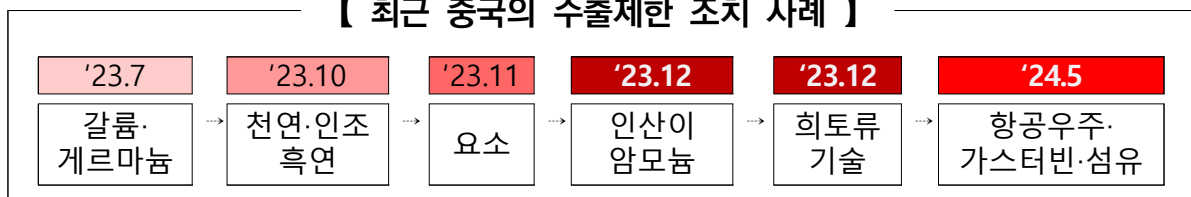
↳ 제조업 육성·혁신, 기술개발, 공공조달 활용 등(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23)

- 특히, 우리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의 높은 對中 의존도가 중첩되며,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리스크가 증대

* 對中/對세계 수입액('23년, %) : (희토류) 84.0, (인듐) 91.6, (천연흑연) 94.1 등

- 日 수출규제,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 중국 수출제한 조치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이 현실화

【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사례 】



⇒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

- ◇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6.27)을 계기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마련

- 동 전략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수립

* 민관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주요 추진과제 등 구체화 + 정책목표 등 제시

【 참고: 주요국 공급망 정책 주요내용 】

- ①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 확충
- ② 핵심·전략 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및 보호체계 강화
- ③ 동맹국 연대·무역장벽 강화, 자원 무기화 등 공급망 블록화

국가	① 역내공급 기반 확충	② 기술우위 확보·보호	③ 공급망 블록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감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생산 친환경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에 세액공제 ■ 반도체과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반도체 제조설비 확충 및 기술개발·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개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AI 기술·제품을 수출허가 대상 포함, 제3국 우회수출 차단 ■ 수입규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産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및 수입물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EF·MSP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입장국 중심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 EU(TTC)·日(JUCIP)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의약품 등 기술·인력협력 확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서비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화물·통신·금융 등 중요설비 도입·유지·관리 사전심사 ■ 반도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제조설비 등 투자에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민 안전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특허비공개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배터리·로봇 등 R&D 지원, 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경제안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협력 강화 및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조정 등 논의 ■ IPEF·QUAD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동맹국 중심 공급망 협력 참여 (히토류 등)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원자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광물 등 의존도의 중장기 완화목표 설정 → 금융·인허가 지원 등 ■ 반도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반도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R&D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경제안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 사전심사 제도 개선,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 기술유출 방지 ■ 후속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연구안보 권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프리카·남미 등과 에너지 등 협력 ■ 공급망 실사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규범에 기초한 공급망 재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순환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장비, 중간재 자급력 확대를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최대 1억위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등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 강화 ■ 5개년('21~'25)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지원강화, 미래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 공급망 확대 ■ 홍색공급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EU 등 규제 우회를 위해 아세안·멕시코 등에 제조공장 설립

Ⅱ.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기본체계

◇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 및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 제시

- 4대 정책방향,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핵심과제 마련
-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공급망기금 등 정책 추진기반 확립

목표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4대

정책 방향

①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 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 ②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②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 ①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
- ②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8대

정책 과제

③ 핵심기술 경쟁력· 보호체계 강화

- ①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
- ② 기술유출 예방 등
보호체계 강화

④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 ①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추진
- ②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기반

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출범

② 공급망기금
적기 가동

③ 공급망 3법 및
민관협업체계 구축

Ⅲ. 4대 정책방향 8대 정책과제

1.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1)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 경제안보품목 대상 확대, 관리 효율화, 고위험 품목 집중 지원 추진

	As-Is		To-Be
품목	200여개		300여개 [제조업·방산·민생분야 확대, 1년주기 갱신]
서비스	없음		물류, 사이버보안 2개 분야 신규 지정
수급 관리	위험도별 구분 無 산발적 지원	⇒	3단계 등급체계 도입 [평가기준 체계화] → 고위험 품목 중심 수급안정화 지원 강화
지원	별도기금 無 재원한정		공급망기금 가동 → 경제안보품목 등 집중 지원

①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 신규 지정 → 매년 갱신

-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200→300여개)
-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지정기준을 체계화*하여 매1년 주기로 전 품목 재검토 추진 단, 대내외 경제여건·환경변화를 감안해 필요시 수시 개편

* 대외의존도, 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국민생활 밀접성 등 9개 세부지표

②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 등을 감안한 수급안정화 시책 마련

- 선택과 집중 →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3단계 등급체계 구축
-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를 설정 →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화 대책* 마련 + 이행점검 추진

* (예)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등 집중 지원

등급	주요 내용	관리방향
①급	▶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 및 대체수입이 곤란, 산업 중요도 높	▶ 성과목표 설정 ▶ 범정부 대책 수립
②급	▶ 1등급 대비 위험도·중요도 등이 다소 낮지만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상존	▶ 소관부처 중심 모니터링 및 수급대책 마련
③급	▶ 1·2등급 대비 대응 시급성은 낮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술 자립화 등 필요	

○ 금번 전략계기 시급한 품목 중심 핵심 추진과제 점검·추진

【 품목·서비스 수급안정화 추진과제(예시) 】

품목·서비스	핵심 추진과제
희토 영구자석	▪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개발
물리브덴	▪ 반도체 원료용(초고순도) 정·제련 기술개발 지원
핵심광물	▪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투자·출자액의 법인세 공제(3%)) 지원 요건 완화
	▪ 광산 개발 지분투자 등 공급망기금 지원 추진
물류	▪ 주요 해운거점 해외터미널 및 물류센터 확충(공급망기금 등)
	▪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 → 위기시 화물처리 대응력 강화 * 자율주행 화물건인 테스트(~'25), 인천공항 스마트화물터미널 구축(~'28)
사이버 보안	▪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 S/W 개발공급 기업을 중심으로 안전한 SW 개발유통 환경 구축, S/W 구성요소 및 변경이력 등을 포함하는 'S/W 구성요소 명세서'를 생성·관리할 수 있는 체계 지원
	▪ 정부 S/W조달 과정에서 안전한 S/W도입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지정·관리 방안 마련(개발출처·보안취약점 관리 등)

3] 공급망기금(5조원)을 가동하여(8월~)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1]} 지정
→ 우선지원 대상^{2]}으로 선정하고 우대금리 적용

1]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선정 가이드라인 등 既배포)

2]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1등급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

○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한도 배정 및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 공세적 지원 추진

* 공급망 기금운용계획 및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시 검토

○ 국내+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전략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공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금지원 효과 제고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를 통해 수급안정화 방안 등 지속 점검 ↳ 기존의 1차관 주재 경제안보품목 TF를 개편하여 전문위로 운영
👉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 등 확정·추진

(2)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 추진 방향 〉

◇ 핵심물자 비축물량·대상확대, 비축제도 개선 및 제반인프라 등 확충

	As-Is	To-Be
비축 물량	희소금속 비축 부족 요소 등 0~30일	희소금속 60~180일분(~'27) 요소 등 30~80일분(~'24) 경제안보품목 추가 발굴
제도	단건구매	연간 공급계약 방식 도입
인프라	창고 등 부족	비축시설 확충 추진
거버넌스	범부처 체계不在	범부처 합동 비축전문위원회 신설 →비축전략 수립, 부처간 협업 강화

①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

- 산업·민생관련 주요 핵심품목 등의 비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신규 비축 필요품목 지속 발굴* 등 추진

* 비축물자 고사: (現) 10개(1.알루미늄류~10.긴급수급조절물자) → (改) 11개(+11.경제안보품목)

주요 비축대상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 계획

구분	분야	기존	확대	기간	담당
산업	희소금속	5.8~180일	60~180일분	~'27	광해공단
민생	차량용 요소 등	0~30일분	30~80일분	~'24	조달청

② 제도 개선¹⁾, 다양한 방식의 비축²⁾ 등 통해 수급안정 효과 제고

1) 가격 급등에 대비, 단건 구매방식 外 연간공급계약 도입

2) (타소비축)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 수요기업이 보관 및 재고순환

③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 확충 등 추진

*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25),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27) 시설 확충 추진

④ 공급망위 산하에 비축전문위* 설치 → 범부처 비축전략 수립

* 기재부 2차관(위원장), 기재부 재정차관보·조달청 차장(공동간사),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위원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 등 비축지원시책 수립, 협업사항 논의

👉 비축 전문위원회를 통해 추가과제 지속 발굴 → 기본계획 반영

2.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1)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

〈 추진 방향 〉			
◇ 국내생산 기반 강화, U턴·외투 촉진, 해외자원 확보·도입 등 생태계 강화			
	As-Is		To-Be
국내생산	요소 ^{민생} ·초순수 ^{주력} 해외 高의존품목 상존		민생·주력산업 분야 핵심품목 등 국내생산 및 국산화 검토·추진
Inter Clustering	Value Chain 上 지원정책 분절	⇒	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위한 부처간+단지간 협력, 전주기 지원 강화
중기지원	소부장 등 지원분산		공급망 소분야 유망 중소기업선정→지원
해외자원	해외자원 투자 위축		세제지원 강화, 제도개선 등 추진

① 핵심품목·기술 등의 국내 생산 및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

-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검토
-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 및 기술 국산화 지원 추진
* (반도체) 초순수(∼'25), (차세대원자력)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35),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30)
- 공급망 안정(국내생산, 대체기술개발 등) 분야 사업재편* 추진기업 발굴·지원을 본격화하고 컨설팅 제공, 투자애로 해소 등 지원
* 기활법 개정('23.12)에 따라 공급망 유형 신설 → '24.7월부터 시행

② 핵심품목·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 구축

- 핵심품목을 선정해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실증, 운송(물류) 양산, 납품 소주기의 완결형 공급망 구축 전략* 수립
* 과기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복지부(바이오)+방사청 등 간 협업체계 구축
→ 소부장 대상 시범 프로젝트 발굴 → 미래첨단전략 분야(우주항공) 등으로 확대
- 소부장 단지별 밸류체인 분석 → 단지 간 협력을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을 10개 이상 발굴(∼'27)
* (예)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및 대구(전기구동 부품) 간 협력 자율주행 셔틀 개발

③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U턴 및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 추진

* (예) 시설투자, 지분인수, 기술 확보 등 관련 포괄적 금융지원 제공

-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생산, 대체기술 보유 등)의 U턴 시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여 U턴 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

* (現)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소부장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改)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련기업(생산, 대체기술 보유 등) 면제대상에 추가

- 동반·협력형 등 U턴 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

* (동반) 투자보조율 5% 가산, (협력) 구조조정 요건 폐지, (U턴 보조금(첨단)) 비수도권 300→400억원 (연구시설·장비투자) 한도外 50억원 추가지원

④ 공급망 분야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 중점 육성전략 수립

-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쏠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추진계획(안) 마련(~'25)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6~'28) 수립 시 반영

-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기금 지원 시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추진

⑤ 핵심광물 및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 확보 역량 확충

-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 완화*

* (예)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현행: 단독으로 100% 출자) 완화 등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시 관세혜택 제공 방안 검토

- 공공기관 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광해공단), 민간 해외자원개발 인력 양성(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지원

- 국내기업이 곡물망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시 저리융자 지원

- 비상시 해외 확보 농업자원 국내 반입을 위한 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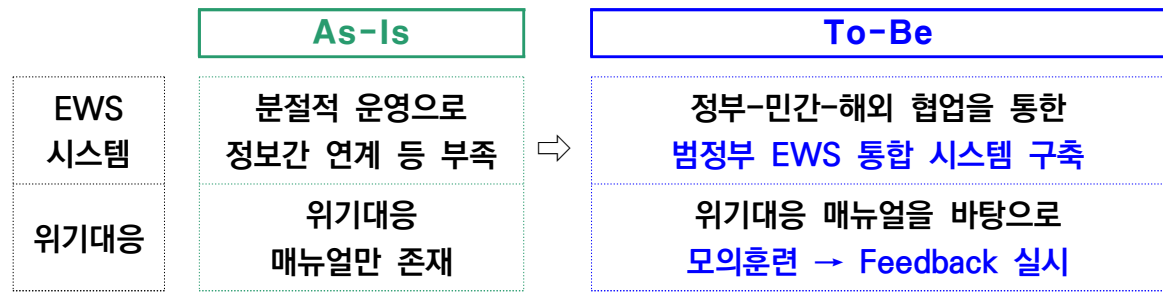
* 반입명령 이행 시 기업 손실보상 절차 마련 등 비상시 국내 반입명령의 실효성 확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 등 지속 발굴**

(2)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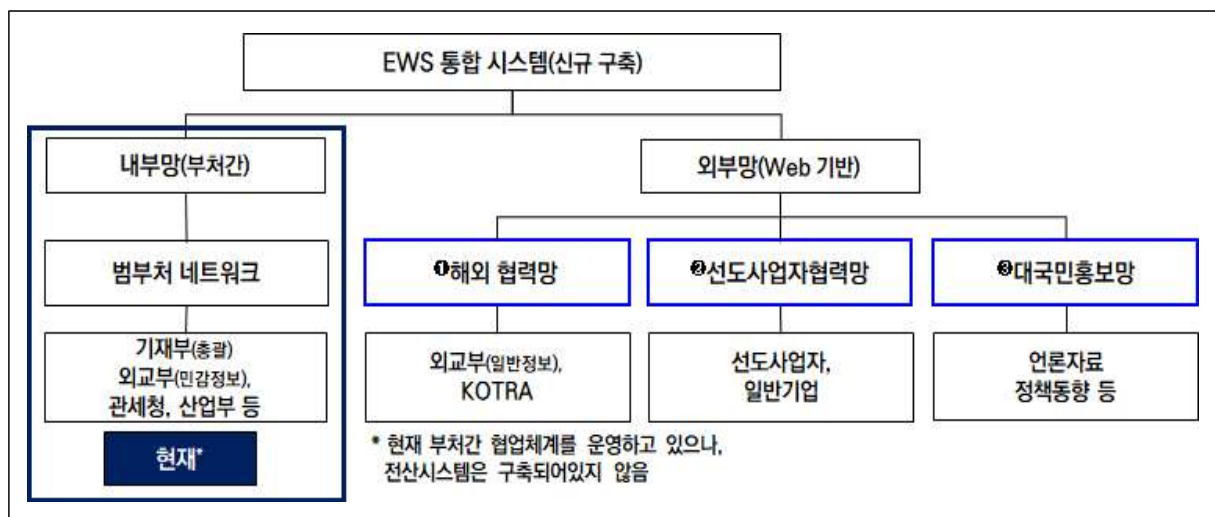
〈 추진 방향 〉

◇ 범정부-민간 통합 EWS 시스템 구축고도화 +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① 범정부 + 민간(해외·기업·국민) EWS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 소관부처·외교부·관세청 중심의 현행 EWS 체계를 선도사업자 등 민간영역까지 확장하고 정보간 연계 및 분석기능을 강화
- (내부) 부처별 EWS를 통합하여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운영
- (외부) 기업정보·언론동향 등 정성정보 확충 + 대외소통 제고
- ※ 단, 경제안보 특성 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보안성 확보 노력(업체명 비식별화 등) 병행



②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매뉴얼·대응체계 등 환류·발전

-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등 발전 도모
- 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미·일 등 여타국과 공동으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3.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1)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

〈 추진 방향 〉

◇ 공급망 핵심기술 등에 대한 R&D 재정지원 확대 + 다각적 지원 병행

	As-Is	To-Be
예산	공급망 분야 R&D 예산 지원 중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관련 R&D 예산지원 지속 강화
세제	핵심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지원 중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검토
지원체계	소부장,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공급망·경제안보 중요기술 지속 발굴추가 → 기술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추진
특허표준	선점 미흡	중요분야 선제 식별 → 선점 지원 강화

① 첨단전략산업·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관련 R&D지원 지속 확대

- 첨단전략 산업 및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R&D 재정지원 지속 확대

②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강화 추진

-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의 R&D 촉진을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검토

③ 공급망 관련 ①소부장·②국가전략·③국가첨단전략 기술육성 체계화

- 매년 갱신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서비스 등을 참고하여, 공급망·경제안보 영향이 큰 기술을 지속 점검·발굴하고 추가

해당법 상 기술지정 고려요건 중 공급망·경제안보 관련 사항

①소부장 핵심기술	②국가전략기술	③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국민경제 및 연관산업 영향, 국가안보측면 전략적 활용 가능성	해당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 공급망 안정 밀접 기술에 대한 분야별 지원방안 수립·추진

【 주요 추진과제 】

분야	핵심 추진과제
① 소부장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대 핵심전략기술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기반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큰 기술 발굴 →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기존 1개 품목에서 다수품목을 포괄하는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구축 → R&D 및 상용화·특허 등 소주기 지원
② 국가 전략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경제안보 직결기술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과제 구체화 탄소중립 등 新공급망 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 발굴·육성
③ 국가 첨단전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대규모 R&D 예타를 통해 향후 10년간 민관 공동 자금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4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 및 국제표준 선점 지원

- 해외선도기업 특허를 회피·무효화하고, 공백영역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의 R&D 전략수립 지원*

* R&D 부처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R&D 수행단계에서 전세계 특허정보를 분석, ①최적의 R&D 방향 설정, ②해외기업의 특허장벽 극복, ③핵심 특허 선점 등을 지원

- 첨단·전략분야 중 국제표준 특허 로열티 이슈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¹⁾하고 표준특허 창출 지원²⁾

1) 경쟁·위험 국가 또는 기업의 출원량 급변, 대량의 특허권 이전 등 식별

2) R&D 방향, 표준제안서 작성방향, 특허 권리범위 설계 등 컨설팅 제공

5 첨단산업 분야 주요국 등과의 기술 협력 등 파트너십 확대

국가별 주요 기술협력 아젠다(안)

미국	첨단분야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한미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
EU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다자 R&D 플랫폼 등을 통해 첨단기술협력 활성화
일본	한미일 3국간 산업기술 협력 이슈 발굴 등 추진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 등을 통해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등을 추가보완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과 연계

(2) 기술 유출예방 등 보호체계 강화

〈 추진 방향 〉

◇ 첨단·국방·기간산업 등 기술유출 방지체계 강화 및 엄벌체계 마련

	As-Is	To-Be
첨단	既투자 진행건 재심불가	Call-in 제도 도입 → 위험 판단 시 재심, 외투기업이 국내기업 비밀침해 시 처벌강화
국방	사이버공격 위험 증대 비밀특허 위반 벌칙 無	방산업계 핵심기술 보호지원 강화 국방 비밀특허제도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기간 산업	사업재편 시 기술유출 위험	보호 필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자 처벌 강화

1]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방지체계 정비

- 외국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유기업 인수합병 추진 시 既투자 진행 건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Call-in 제도 도입
- 방산메일시스템 구축 등 방산업계 핵심기술 보호 및 보안 취약분야 보강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 * (예) 사이버공격에 대한 실시간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협력업체 지원 등
- 기간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보호필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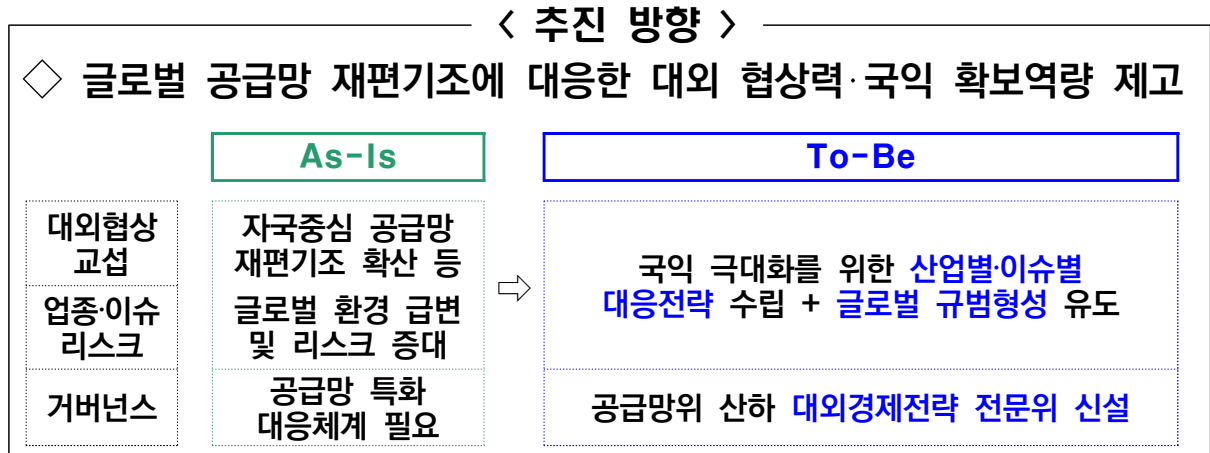
2]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유출 유인 축소

- 외투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취득한 국내기업 영업 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명확화*
 - * (現)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 (改) 취득·사용 + 누설도 포함[부정경쟁방지법]
-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
 - * 주요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벌칙 규정이 부재 →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에 대한 양형(대법원은 최대 징역 18년 권고) 등 고려하여 벌칙 신설[특허법]
- 국가핵심기술 유출자 처벌 구성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 *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범→고의범), 해외유출 벌금한도 상향

☞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보완구체화 →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반영

4.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1)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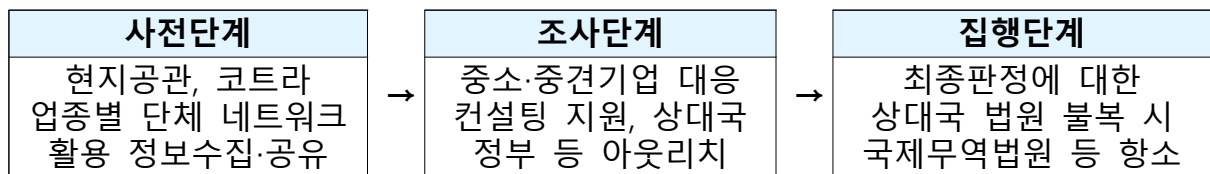


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외 협상력·교섭력 확충

-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정책수단 및 정부 교섭 자산 점검 →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추진

②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에 따른 업종별·이슈별 대응전략 마련

-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한 산업별 대응계획 마련·추진
- 주요국의 법·제도 분석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여타국 입법·행정조치 등의 우리 경제 혜택 극대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공급망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소통·협력 강화
- 해외 무역장벽(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협업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쉼주기 대응체계 운영



③ 공급망위 下 ‘대외경제전략 전문위’ 신설 → 대응전략 조율

- * 기재부 1차관(위원장), 경제부처 및 관계기관 1급, 민간 전문가(필요시) 등 참석
→ 공급망관련 주요이슈 및 대응수단, 교섭자산 점검, 리스크 관리방안 등 모색

☞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 등을 보완 및 구체화 → 공급망 기본계획에 반영**

(2)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 방향 〉

◇ 다·양자·글로벌사우스·광물·에너지·ODA 등 다각적·중층적 협력망 구축

	As-Is	⇒	To-Be
협력체계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공동 프로젝트팀 발굴 등 전략적 활용
생산기지	MoU 중심 체결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및 확산
광물· 에너지	특정국 편중		글로벌 사우스로의 분산 추진
	특정국 의존도 높음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협력기반 확충
ODA	ODA 기여도 지속 확대		자원부국 EDCF 지원 강화 EDCF-공급망기금 연계

①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인 IPEF Pillar2*의 전략적 활용 추진

* 한·미·일·베트남·인도 등 14개국 참여(우리나라 발효 4.17)

- 가입국과의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 또는 주요 품목을 선정·제출하고, 공급망 안정 협력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팀* 발굴·운영(~'24)

* (예) 협력 분야 또는 주요품목의 인프라확충, 물류개선, 기술협력 등 추진

- 공급망협력 강화와 수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내 물류개선, R&D, 위기대응 공조 등 협력 다각화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심협력국과의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 확산

- 핵심협력국과 교역·산업협력 구조 등을 고려한 공급망 협력을 확산하여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핫라인구축	■ 교란 징후 감지 시 상호 즉시 통보, 대체공급선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무역원활화	■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장벽 최소화, 공급망 취약품목 등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협력고도화	■ 협력분야 대상 공동 R&D, 표준, 상호인정 등 논의

③ 특정국에 편중된 우리 생산기지를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분산

*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중국, 동남아 및 서남아 등 제3세계·개도국

- 공급망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 투자 수요에 맞춘 법률자문, 정보제공 등 지원 추진
- 주요 현지투자 프로젝트는 인력·비자·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

④ MSP, 양자·소다자 협력채널 등 중심으로 핵심광물 협력 강화

- MSP¹⁾ 시범사업 워킹그룹 활동 + 공급망기금 연계²⁾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다변화 추진

1) 美 주도로 한, 일, 호, 캐 등 14개국 및 EU 참여 →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2) MSP 논의되는 공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급망기금 활용 방안 지속 검토

- 한-미-베(희토류 공동연구), 한-몽(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 한-우즈베크·카자흐(핵심광물협력 파트너십), 한-아프리카(핵심광물 대화) 등 광물협력 지속 강화

⑤ 핵심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수급다변화를 위한 협력기반 확충

-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제도를 연장하여('24→'27), 중동外 지역(미주·아프리카·유럽)과의 수급계약 지원

* 중동 外 지역 수입시 추가 운송비 일부를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부과금에서 환급

-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 및 일본·싱가폴 등 인접국과의 LNG 스왑, 정보공유 추진 등 양자협력 강화


⑥ 우리 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ODA 정책 추진

- 주요 공급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EDCF 및 KOICA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망 관련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적극 추진

* (예) 인프라건설(유상) + 개발컨설팅(무상) + 인프라 관리시스템 개발(민간)

- 자원개발 등 공급망 관련 EDCF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원하고, 공급망기금·수원국과 연계 강화*

* (예) EDCF 정책협의 시 광물개발(공급망기금) + 주변 도로·항만 등(EDCF) 사업발굴

 **대외경제전략 자문위원회, EDCF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 등 보완·점검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연계**

IV. 추진기반 확립

1.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출범

〈 추진 방향 〉

- ◇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가동 → **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①경제안보 품목서비스, ②대외경제전략, ③비축 3개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발굴, 사전 이견조율 등 공급망위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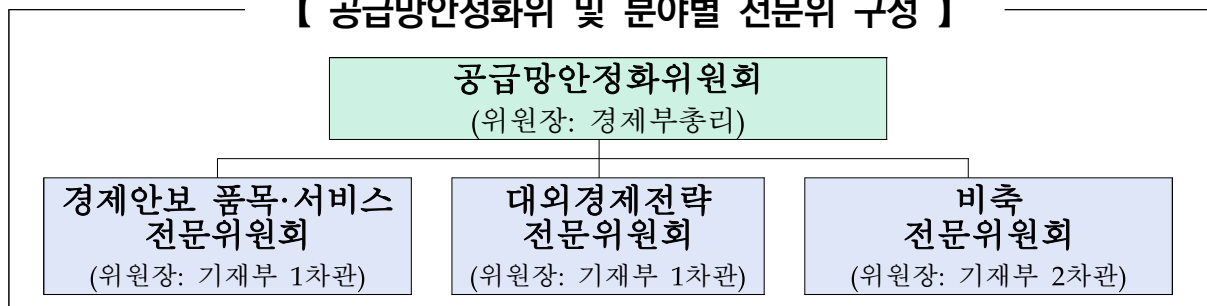
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의 공급망정책 Control-Tower 역할 확립

- 경제부총리(위원장) 포함 공급망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정부 위원 19명*, 민간위원 6명 총 25명으로 구성
 - * 경제부총리(위원장), 국정원장, 과기부·외교부·행안부·국방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관세·조달청장, 경제수석, 안보실3차장,
- 공급망 안정에 관한 주요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조정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의결,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 등
- 국내외 공급망 현안 관련 주요정책(예: 향후 수립되는 각 부처의 공급망 관련 주요 기본계획 등)들은 **공급망위원회에 보고**

② ①경제안보 품목·서비스, ②비축, ③대외경제전략 3개 전문위 설치

- 기재부 차관(위원장) 외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위원(필요시)을 포함하여 각 분과위원 총 10명 이내로 구성
- 공급망위원회를 보좌하여 주요정책의 발굴·사전조율 등 진행
-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참석부처, 민간전문가 참석여부 등을 안전에 따라 신축 조정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 공급망안정화위 및 분야별 전문위 구성 】



분야별 전문위 구성 및 주요 역할

구분	구성 및 의의	주요 논의사항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부 1차관(위원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간사)*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기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기재부 1차관 주재)를 품목·서비스 전문위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수급 안정화 방안 공급망관련 기술경쟁력 및 기술보호체계 강화 국내외 공급망생태계 조성·강화, 위기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부 1차관(위원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간사)*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공급망 관련 국제동향, 대외협력방향 자문
비축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부 2차관(위원장), 기재부 재정차관보·조달청 차장 (공동간사)*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비축관련 정책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축지원 시책 등 범부처 비축전략 수립 비축관련 부처 간 협력사항 논의

※ (간사) 회의일정, 안건조율, 부처간 이견 및 쟁점 등 발생 시 사전조정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 및 가동('24.7~)**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작업 진행**

2. 공급망안정화 기금 가동

〈 추진 방향 〉

◇ **하반기 중 5조원 규모로 출범 → 초기성과를 신속히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선도사업자 지정 등 차질없이 준비**

① 하반기 中 5조원 규모로 출범 →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


- 기금운용심의위 구성¹⁾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 선도사업자 지정²⁾ 등 사전 필요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24.8)

1) 기재위 추천 2명, 부처 추천 4명, 수은 1명, 총 7명

2) 선도사업자 지정 가이드라인 既마련 → 부처별 공고 및 심사·선정(~8월)

- 수요기업 등 대상 사전홍보 등을 통해 대상사업 선제 발굴

② 기금운용계획(안) 사전 준비 → 기금운용심의위 구성 즉시 상정

 **지원실적 및 성과 등 고려해 '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 추진**

* '24.8~9월 중 '25년도 국회보증 동의안 제출 추진

3. 공급망 3법 및 민관협업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 ◇ 「공급망 3법(①공급망안정화법, ②소부장법, ③자원안보법)」 제정완료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직완비가동 등 차질없이 추진
- ◇ 공급망 분야에 대한 연구·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 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협업체계 구축·가동

1] 공급망 3법 하위법령 제정·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없이 준비

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정 既완료*, 기본계획 수립('24.4Q)

* (시행령)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 등 구성, EWS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② (소부장특별법) 향후 주요 정책은 공급망 기본계획과 연계

③ (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등 제정¹⁾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²⁾

1)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안보 진단·평가 주기·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25.2月 법 시행 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공급망3법 기본체계

구분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24.6.27	'23.12.21(개정안 既시행)	'25.2.7
거버넌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경제부총리)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부총리)	자원안보협의회 (산업부장관)
기본계획	3년단위 수립	기한없음	5년단위 수립
분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산업 소부장 품목	핵심자원
지원대상	공급망 선도사업자	특화선도기업	공급기관
EWS	중앙행정기관 운영 기재부 총괄 점검	소부장 EWS	자원안보 EWS
재원	공급망안정화 기금	소부장특별회계	

※ 공급망 3법 외 기술육성·보호 등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기부),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산업부),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등에서 규정

2]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조직 완비·가동

*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정식 직제화 등 → 경제공급망기획관 출범
(산업부) 광물자원팀 既설치,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 신설

③ 공급망 연구·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가동

○ 공급망 관련분야 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협업 공급망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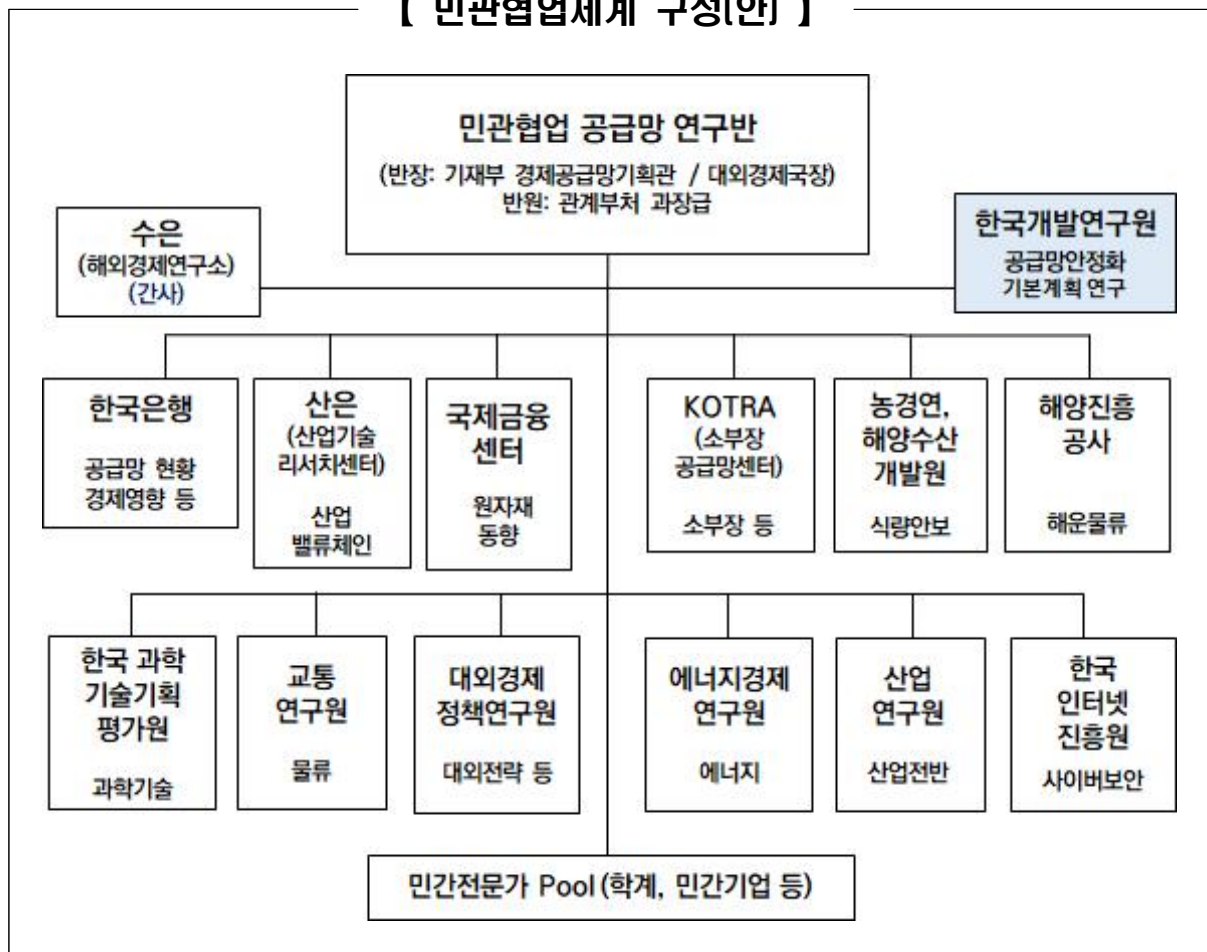
- (구성) 기재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 및 공급망 유관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참여

* (국내분야) 경제공급망기획관 / (대외분야) 대외경제국장

- (역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공급망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현안이슈 분석 등

※ 수은 해외경제연구소(간사): 회의 운영, 연구자료 공유, 포럼개최 지원 등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총괄 연구

【 민관협업체계 구성(안) 】



○ 사안에 따라 연구기관 외 학계, 기업인 등을 폭넓게 초청
→ 공급망정책연구 포럼(Networking, 민간 의견 수렴) 등 개최

☞ 부처 간 + 민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연구기능 등을 긴밀히 연계

V. 향후 추진계획

- ('24.7~) 분야별 전문위원회, '민관협업 공급망 연구반' 등을 신속하게 구성·가동
 - 공급망안정화 전략을 기반으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보완
→ 공급망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분야별 협·단체, 기업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24.3Q) 공급망기금 운용계획 확정 → 선도사업자 등 지원 개시
 - 공급망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對국회 소통 추진(최대한 8월 중 가동 추진)
 - * 기재위 추천 2명, 부처 추천 4명, 수는 1명 등
- ('24.8~) '25년 공급망기금 관련 국회 보증동의안 준비·제출
- ('24.4Q)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수립·발표
 - 향후 3개년('25~'27)을 시야에 두고 도전적 정책목표를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풍부하게 보완
- (~'25.1)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시행계획('25) 수립 및 의결